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127
- 발 의 자 : 김정태 의원 (찬성의원 47명)
- 발 의 일 : 2021년 2월 2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바, 이에 위촉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 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4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의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나. 내용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유를 두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도 위원의 결격사유 외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2021.1) 권고사례〉

의뢰법령	문제점 및 권고안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문제점) 위촉위원의 자격 불명확, 임기규정 미비,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부재 등 심사 의결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하 우려
	(권고안)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이에 따라 조례에 위원의 결격사유(제4조)만을 두고 있는 공익사업선정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 허가, 분쟁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이에 대한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의대상 : 12개 분야 390개 사업 8,673백만원
- 심의결과 : 164개 사업 2,260백만원(심사건수 대비 42%)

(단위:건/백만원)

사업유형 (선정 건, 지원금액)	구분	신청 사업수		신청 금액	선정현황		1단체 당 평균지원액
					건 수	지원금액	
합 계		390		8,673	164	2,260	13.9
문화·관광도시 (23개, 338백만원)	신규	30	57	664	14	210	15.0
	기존	27		621	9	128	14.3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15개, 183백만원)	신규	19	34	381	9	120	13.4
	기존	15		306	6	63	12.6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5개, 73백만원)	신규	8	10	207	4	65	16.3
	기존	2		37	1	8	7.6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17개, 219백만원)	신규	20	41	399	10	126	12.6
	기존	21		450	7	93	13.3
아동·청소년 지원 (15개, 209백만원)	신규	22	36	479	11	151	13.7
	기존	14		282	4	58	14.6
시민의식개선 (19개, 255백만원)	신규	24	45	494	12	156	13.0
	기존	21		481	7	99	14.2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9개, 171백만원)	신규	8	20	213	5	67	16.8
	기존	12		271	4	104	14.0
교통·안전 (10개, 151백만원)	신규	9	25	249	5	79	15.7
	기존	16		347	5	72	14.3
통일·안보 (15개, 143백만원)	신규	14	36	275	7	87	12.4
	기존	22		503	8	56	14.8
북한이탈주민 지원 (6개, 73백만원)	신규	4	12	113	3	36	13.7
	기존	8		178	3	37	14.6
환경보전·자원절약 (11개, 150백만원)	신규	13	26	276	7	87	12.4
	기존	13		306	4	63	15.8
기타공익사업 (19개, 295백만원)	신규	23	48	546	11	172	15.7
	기존	25		595	8	123	15.4

〈2020년(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명단〉

(2020. 12월)

연번	성명	성별	생년	경력사항	임기	비고
1	000	男	1957	現) (재)유더블유씨코리아나은재단 이사장 現) (주)대도산업개발 대표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2020.12.17.~ 2022.12.16	시민 단체 추천
2	00	男	1957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現)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現) (사)한국녹색도시협회 이사장	"	
3	000	男	1963	現)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現) 사단법인 공공자치학회 대표이사 現)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감사	"	
4	000	女	1970	現)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現)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現) 새만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5	000	女	1971	現) 멋진사람들 대표 前) 착한사람들 부회장	"	
6	000	女	1973	現) (사)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現) 행정안전부기부심사위원	"	
7	000	女	1973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과장 前)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팀장 前) 아름다운재단 1%모금팀. 배분사업팀장	"	
8	000	男	1974	現)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前)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나눔의집협의회 교육위원	"	
9	000	女	1975	現) 한국공공사회학회 부회장 現) 청주대 사회학 강사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10	000	男	1978	現)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現)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심사위원회 위원	"	
11	000	男	1983	現)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공인회계사) 現) (사)한국모금가협회 감사 前)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근무	"	
12	000	女	1987	現) 비소나눔마을 이사장 現) 한양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前) KOICA 민관협력 캄보디아 미디어사업형성 조사	"	
13	000	男	1966	現)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체육학전공 교수 前) 한국체육정책학회 이사	"	
14	000	女	1976	現) 법률사무소 화수 대표변호사 現) 용인시 법률고문 前)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	
15	000	女	1983	現)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現)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자문변호사	"	

- 또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의 결정 및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2년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연번	구분	개최일	본회의 안건명
1	본회의	2019-02-11	·2019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선정계획 ·분과위원회구성및운영 ·사업계획수립 컨설팅단 구성
2	본회의	2019-03-04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단체 최종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예비단체 선정 ·2019 선정단체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실시
3	본회의	2019-12-16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추진방안
4	본회의	2020-02-11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심사선정 계획(안) ·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안) ·사업계획수립 컨설팅단 구성(안) ·기타지원사업의 심사선정에관한 사항
5	본회의	2020-03-04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단체 최종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예비단체선정 ·코로나19로인한 영상교육 및 집행일정변경 ·보조금집행지침변경 ·2020 선정단체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실시

- 다만, 서울시의 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부재 등으로 심의·의결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조례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민정
------	-----	-------	-----